



주간통일정세 2008-44(2008.10.27~11.02)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8-44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北, 김정일 축구관람 사진 공개(11/2,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 TV; 노동신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군 ‘만경봉’팀과 ‘제비’팀 간 축구경기를 관람하는 사진을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노동신문 등이 2일 일제히 공개, 그러나 이들 언론은 사진 촬영 일시와 장소를 밝히지 않았으며, 경기 관람 동영상 역시 공개하지 않음.
-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은 김 위원장이 앉아서 무언가를 보면서 웃는 모습과 축구 경기장면 각 1장임. 무언가를 관전하는 사진에서 김 위원장은 검은색 안경에 두툼한 갈색 반코트를 입고 소파에 앉은 채 오른손은 팔걸이에 얹고 다소 힘이 없어 보이는 듯한 왼손은 무릎 위에 늘어뜨린 모습이었음.
- 조선중앙TV도 중앙통신이 내보낸 김 위원장의 앉아있는 사진 외에 선 채로 간부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사진 3장과 축구경기 장면 10장 등 도합 14장을 공개
- 그러나 이들 사진 모두에서 김 위원장 모습을 배경으로 경기장면이나 일반 관중석이 잡히지는 않은 채 김 위원장, 경기장면 등이 각각 따로 촬영
- 이날 김 위원장의 경기관람 사진에는 현철해 군 대장 등이 포함됐으나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음.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수행 간부로 현철해, 리명수, 김명국 대장과 장성택 행정부장, 리제강, 리재일 당 제1부부장 등을 언급

● 佛의사, 난 모르는 일…평양 안갔다(10/31, 연합뉴스)

-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치료를 위해 최근 평양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의 뇌신경외과 전문의 프랑수아-사비에 루(57)가 30일 이러한 보도 내용을 부인
- 그러나 그는 자신이 최근 파리에서 북한 공관이 제공한 차량으로 공항에 갔으며, 앞서 2-3일 전 김 위원장의 아들인지는 모르겠으나 김(Kim)이라는 성을 가진 한국인이 자신을 찾아왔었다고 시인
- 파리 소재 생트-안 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은 루는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이뤄진 AP통신과의 통화에서 일본 후지TV가 루 과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평양행 화면을 방송한 데 대해 “난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AP가 31일 보도
- 신경학·정신의학 전문의인 루 과장은 북한과의 인연이 10년도 넘으며,



지난 4월에도 강의와 실습을 위해 평양에 갔다면서 “그들이 왜 15년 전에 나를 접촉하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다. 내게도 그것은 늘 약간의 미스터리였다”고 언급

● **김정남 접촉 프랑스의사 평양 입국(10/29, 후지TV)**

-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 뇌신경외과 의사가 10월 24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통해 평양으로 들어갔다고 일본 후지TV가 29일 보도
- 방송은 이 의사가 프랑스 파리의 산타누 병원 뇌신경외과의 권위자인 프랑스와 구자비에 르 부장이라면서 그가 지난주 파리 주재 유네스코 대표부의 차량으로 샤를 드골 국제공항으로 이동, 10월 24일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보도
- 후지TV는 “르 부장은 지난 8월에도 평양을 방문한 바 있다”며 “이번 방북도 김정일 위원장의 진료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

나. 정치 관련

● **北 청년동맹, 평양서 ‘충성모임’(11/2, 조선중앙방송)**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은 10월 31일과 11월 1일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전국청년동맹 초급일꾼(간부) 열성자회의’를 개최하고 청년조직 강화문제를 논의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일 보도
- 김종린 노동당 중앙위 비서와 관련기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당의 영도를 받들고 청년동맹 초급조직들을 수령결사옹위의 결정체, 선군청년전위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이 토의됐다”고 방송은 보도

● **北, 南 정부 비난 공세 계속(11/1, 민화협 대변인성명; 평양방송;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방송매체들과 단체는 1일에도 남한 정부의 일부 통일·진보 단체에 대한 수사 등에 비난 공세를 이어감.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가 “진보운동 단체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6·15시대의 전진을 가로막아 보려는 용납못할” 행위라고 비난
- 평양방송도 ‘묵과할 수 없는 파쇼적이며 도발적인 망동’이라는 논평에서 “지금 남조선(남한)에서는 북남 공동선언을 지지하고 그 이행을 요구하는 각계 단체들과 인민들의 투쟁은 다 보안법상의 이적행위로 몰려 탄압당하고 있다”면서 “과거 독재시기를 그대로 망불케 하고 있다”고 비난
- 조선중앙방송 역시 남한 정부가 “진보세력을 가차없이 탄압”하고, “급변사태”를 거론하며 “흡수통일 야망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며



“우리의 존엄이고 생명인 신성한 우리 체제를 감히 건드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고도 무자비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

● **北, 호국훈련 비난(10/31, 조평통 서기국 보도;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1일 지상·공중·해상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익히기 위해 30일 시작된 국군의 ‘호국훈련’을 “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하며 “우리는 단호한 대응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

-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를 통해 이 훈련을 “우리(북)에 대한 노골적인 군사적 위협이며 조선반도 정세를 군사적 충돌과 핵전쟁 국면으로 몰아가는 용납 못 할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 특히 이 훈련에 포함된 미군 참여 상륙훈련과 관련, “미국이 운운하는 조선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란 거짓”이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임.

* 호국훈련은 11월 8일까지 수도권과 경북 포항 일대, 서해 상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경기 여주와 이천 일대에서는 2개 군단이 참가하는 남한강 도하훈련, 수도권 전역에서는 중요시설과 지역에 대한 통합방호훈련, 포항 일대에서는 해병과 공군이 참가하는 상륙훈련과 비상활주로 이·착륙훈련, 서해 상에서는 해군의 기동훈련과 해상 사격훈련이 각각 진행

● **北, 박성철 장례식 진행(10/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박성철 노동당 정치국 위원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의 장례식을 치렀다고 보도

- 북한의 국장으로 치러진 장례식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일 총리,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최태복 당 중앙위원회 비서 등 ‘국가장의위원회’ 위원들과 유가족 등이 참석했고,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이 ‘애도사’를 낭독, 통신은 ‘혁명 1세대’인 박성철의 시신이 추도곡과 조총이 울리는 가운데 묘지에 안치됐다고 전했다. 묘지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음.

● **노동신문,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비난(10/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우리의 힘을 오판하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한국과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의 신속한 전개와 전쟁예비물자 양도 등을 약속한 것은 북한에 대한 “용납 못할 군사적 도전”이라며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바라다면 “그에 배치되는 군사적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 신문은 “우리 공화국(북한)은 전쟁 억제력을 더욱 튼튼히 다질 것”



이라며 “만일 적들이 한사코 선불질을 한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강위력한 선군의 총대로 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보복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

● **北청년단체, ‘강성대국 건설 돌격대’ 결의(10/29,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대표적 청년단체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28일 평양에서 제38차 전원회의를 열고 ‘강성대국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29일 보도
- 참석자들은 “청년들이 강성대국 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선봉대, 돌격대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한 뒤 생산현장에서 ‘대중적 혁신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다고 방송은 소개
- 회의에는 리용철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1비서를 비롯해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일선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결정서’가 채택됐다고 방송은 보도, 청년동맹은 곧 평양에서 북한 전역의 초급 간부들이 참석하는 ‘열성자 회의’를 개최할 예정
-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만 14~30세의 청년, 학생들을 가입 대상으로 한 이 단체는 1946년 1월17일 창립됐으며 현재 맹원 수는 500만명으로 추정

● **北, 임업상에 김광룡 임명(10/29, 연합뉴스)**

- 북한 임업상이 석군수에서 김광영으로 교체된 것으로 29일 알려짐. 평양방송은 10월 10일 발표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담화’에 대한 임업성 반응을 소개하면서 “김광영 임업상과 부상 럽천범 동무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해 2004년 10월 임명된 것으로 알려진 석군수 임업상이 김광영으로 바뀌었음을 확인
- * 김광영 임업상은 부상에서 승진 기용됐으며, 2007년 10월 임업성 부상으로 북한 임업성 대표단을 이끌고 러시아를 방문해 북-러 정 부간 무역·경제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임업분과위원회 제12차 회의에 참석한 바 있음.

● **北군부, “삐라살포 등에 軍 실천행동” 경고(10/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군부는 28일 남한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살포 등이 계속될 경우 10월 2일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밝힌 대로 북한 군대의 “단호한 실천행동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
- 대변인은 이어 “날이 갈수록 위협도수를 넘어서고 있는...반공화국 대결소동”과 관련해 “우리 군대의 단호한 입장”을 밝힌다며 3개항의 입장을 발표
- 첫항에서 대변인은 대북 전단살포 등에 대해 남한 당국이 남한 사회의 특수성과 민간단체들의 행동임을 내세우지만 “반공화국 심리전 책동에 계속 매달리려는 불순한 기도”임을 간파하고 있다며 이것이



계속될 경우 개성공단 등에 대한 “실천행동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

- 2번째 항에서 대변인은 북한의 선제타격은 “그 어떤 조기경보체계도 요격체계도 맥을 추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식의 앞선 선제타격이 불바다 정도가 아니라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모든 것을 잣더미로 만들고 그 위에 자주적인 통일조국을 세우는 정의의 타격전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제2의 ‘불바다’ 위협을 강조
- 3번째 항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역사적인 북남선언들과 군사적 합의들”에 대한 남측의 “노골적인 파기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우리가 취하게 될 중대결단을 강력한 군사적 힘으로 담보해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 대변인은 “말로 외우는 두 선언에 대한 존중이나 합의이행을 위한 대화재개보다는 실제적인 실천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

● 北, 뼈라 살포 개성공단에 악영향(10/28, 연합)

- 북한은 27일 경의선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MDL)상에서 열린 군사실무책임자 접촉에서 남측의 전단(뼈라) 살포 행위 중단을 거듭 요구하면서 동시에 군 통신망용 자재·장비 제공을 요청
- 국방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북측은 남측의 전단 살포행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단살포 행위가 중단되도록 우리(남)측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힘.
- 북측은 이날 남측이 전단 살포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후과(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짐. 이상철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대령)은 “북측은 지난 2일 군사실무회담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단 살포가 계속될 경우 개성공단사업과 개성공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군사분계선을 통한 남측 인원의 통행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으며, 개성 및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인원의 체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강조

● 김정일 관련 이(李)국방 발언 北 “용납 못할 도발행위”(10/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대결과 전쟁열에 들뜬 역적배란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이상희 국방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에 대해 “(서방의) 지나친 관심은 (김 위원장의) 버릇을 나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우리의 최고 존엄(김 위원장)과 자주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며 천추에 용납 못할 도발”이라고 27일 보도

● 北, “당과 수령 업적 체득” 강조(10/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운 당과 수령의 혁명업적을 깊이 체득하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군인과 주민들에게



“당과 수령(김일성)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자고 촉구

- 신문은 또 김 주석이 제시한 ‘주체사상’과 김 위원장이 내놓은 ‘선군 사상’을 각각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지도사상, 지도적 지침”이라고 강조하며 두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 힘을 넣어야 한다”고 당부

다. 경제 관련

● 北 프로그램 전시회 질·양 수준 향상(11/1, 조선신보)

- 평양에서 10월 23~30일 열린 ‘제19차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가 규모나 기술면에서 작년에 비해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조선신보가 1일 보도
- 북한의 대표적인 정보기술(IT)관련 연구 발표장인 이번 경연 및 전시회에는 40여개의 성(省), 중앙기관과 120여개 기관, 기업소, 단체 등에서 600여건의 프로그램을 출품, 지난해에 비해 20%가량 늘었다고 보도, 신문은 이번 전시회와 병행해 전국 소프트웨어(S/W)제품 전시회도 열렸으며 우수한 소프트웨어 제품의 판매도 이뤄졌다고 소개

● 北 천리마제강, 신형 전기로 완공(10/31, 조선중앙TV; 조선신보)

- 북한의 대표적 철강업체인 평안남도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가 2008년 2월부터 제작에 들어간 ‘초고전력 전기로’를 완공했다고 조선중앙TV가 31일 보도
- 방송은 이날 현지에서 김영일 내각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업식이 열렸으며, 노동당 중앙위 명의로 현지 근로자들에게 ‘축하문’을 보냈다고 보도
- 조선신보는 신형 전기로에 대해 지난 6월 기존 전기로보다 용량은 3분의 2에 불과하지만 제강시간은 5분의 1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음.

● 北, 산림녹화 명목 폐기밭 회수(제243호, 오늘의 북한소식; 10/30, 연합)

- 북한 당국은 산림 녹화를 위해 주민들이 산지를 개간해 곡물을 심던 폐기밭 경작을 금지하고 이 밭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30일 보도
- ‘오늘의 북한소식’ 제243호에서 “지난 9월 29일 중앙당이 ‘2012년 까지 조국의 산과 들판을 황폐한 곳이 한 곳도 없도록 푸르게 단장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렸다”면서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개인들로부터 소토지를 회수해 나무를 심고 있다고 설명
- 소식지는 함북 부령군 주민들의 경우 폐기밭에 옥수수과 감자, 두부콩, 수수, 조를 심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분의 식량을 확보해 왔는데 이 방침으로 소토지 농사가 금지되자 “그러면 다 죽는다”고 우려



하고 있다고 설명, 한편 평양시를 비롯한 각 지역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양정사업소에서만 식량이 판매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주민들은 양정사업소가 식량 가격을 크게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판매량이 충분할지 모르겠다”며 불안해하고 있다고 보도

● **北작황 조사결과, “좋다 나쁘다” 전언 엇갈려(10/29,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올해 작황에 대한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의 현지 실사 결과 “올해 수확량이 꽤 좋은 편”인 것으로 들었다고 로마 주재 한 아시아 대사관의 외교관이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 방송은 그러나 WFP 아시아사무국의 폴 리슬리 대변인은 “올해 가을 수확량이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될 것 같다”고 엇갈린 말을 했다고 덧붙여 보도
- 익명을 요구한 아시아 대사관의 한 외교관은 WFP와 FAO가 북한의 올해 작황에 대한 최근의 예비 조사결과를 식량 지원국에 제공했다며, 북한의 식량 사정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졌다고 할 정도로 괜찮다”고 주장
- 이에 대해 리슬리 대변인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북한 각 지역의 식량 생산 수준과 올해 식량 부족분을 정확히 파악했다면서, “올해 수확량이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될 것 같다”며 “한마디로 북한의 식량상황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고 표명
- 현재 최종 보고서를 작성중인 FAO의 앙리 조세랑 세계정보·조기경보 국장도 10월 북한의 추수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연료와 비료의 태부족이 수확량에 악영향을 끼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RFA는 보도

● **北 올해 식량부족분 50만~80만t 추정(10/28,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은 최소 50만t에서 최대 80만t가량 될 것이라고 북한경제와 식량문제 전문가인 해거드 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 28일 인터뷰에서 강조
- 올해 북한에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지적, 북한의 “올 가을 수확량은 2006년과 2007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추정
- 올해 초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올해 식량부족량을 166만t 정도로 봤으나 해거드 교수는 “만일 올해 북한이 100만t 이상의 식량이 부족했다면 올해 봄 춘궁기부터 이미 대량아사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

● **北농업성, 올해 농작물 수확 300만t 추정(제240호, 오늘의 북한소식; 10/27, 연합뉴스)**

- 북한의 농업성은 올해 농작물 생산량이 2007년보다 나은 300만t 가량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27일 주장



- ‘오늘의 북한소식’ 제240호에서 “아직 정확한 수확량은 산출되지 않았으나 작년보다 농작물 생산량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면서 “각 지역 보고서와 농업성에서 현장 검시한 결과를 분석해야 비교적 정확한 숫자가 파악되겠지만, 농업성에서는 ‘아마도 300만t 선이 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고 보도

라. 사회·문화 관련

● 北, ‘적십자대회’ 개최(10/31, 조선중앙통신)

-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29~30일 평양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적십자대회’를 열고 2012년까지 발전전략과 사업계획을 토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
- 장재언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장은 보고에서 “적십자회가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자들의 생활 개선에 이바지하며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인도주의적 사명을 수행하는 데 중심을 두고 보건위생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
- 그는 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해 인도주의 문제들을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며 국제적십자사연맹(IFRC)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각국 적십자 단체들과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 행사에는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주북 IFRC 및 ICRC 관계자들이 초대되었음.

● 北, 국가학위학직 수여(10/29, 조선중앙통신)

-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는 28일 김책공업종합대학 로춘식 부장과 리병일 실장에게 교수학직을, 김일성종합대학 교원인 한성철, 박철해 등 16명에게 박사학위를, 63명에게 부교수 학직을 각각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

● 北, 흰범·황구렁이 인공번식 성공(10/28, 조선신보)

- 북한의 중앙동물원이 자연번식이 힘든 흰범과 황구렁이의 번식 방법을 찾아내 “인공번식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8일 보도

● 北, ‘질병 진단법 통일’ 강습회 개최(10/28, 조선신보)

- 북한의 조선의학협회 중앙위원회가 최근 평양에서 의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통일적인 질병진단을 위한 강습회를 열었다고 조선신보가 28일 보도.
- 면역 능력을 높이는 뜸 치료 도입, 동맥경화에 대한 진단 등 최근 북한 의학부문에서 견해의 일치를 봐야 할 일련의 문제들도 다뤄졌다고 신문은 소개



- 유니세프, 2009년 10월 北아동 영양실태 조사(10/27,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아동기금(UNICEF)이 북한 어린이들의 만성적인 영양부족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2009년 10월 북한 당국과 공동으로 북한의 7개 도와 1개 자치도시의 4천800가구를 대상으로 영양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고팔란 발라고팔 유니세프 평양사무소 대표가 발표, 발라고팔 대표는 2009년 조사 결과를 5년전 조사와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 2004년 조사기간과 동일한 10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10일간 평양과 양강도에 이르는 북한 전역에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
 - 발라고팔 대표는 현재 북한 함경북도과 양강도 지역 어린이들의 영양실조가 특히 심각해 이 지역 모든 병원은 영양 재활치료를 받는 어린이들로 넘쳐나고 있다고 전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황해북도 연탄군에서 시범적으로 벌이고 있는 아동 영양실조 관리사업이 성공하면 이를 북한 전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유니세프는 북한에서 1998년부터 2년에 한 차례씩 7세 미만 어린이와 24개월 이하 영아를 가진 여성의 영양상태를 조사하다 북한 당국의 비협조 때문에 2004년을 마지막으로 중단, 2009년 조사가 이뤄지면 5년만에 재개되는 영양실태 조사는 유엔인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15년만에 이뤄진 인구주택총조사, 유엔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의 주도로 4년만에 재개된 수확량 조사에 이어 3번째 재개되는 대규모 북한 현지 실태조사가 됨.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관련

- 정부, '북핵검증의정서-철강재' 연계검토(10/31, 연합)
 - 정부가 북핵 6자회담 틀에서 북에 주기로 한 철강재 3천t 제공을 핵검증 의정서가 채택될 때까지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북·미 협상으로 이뤄진 최근 북핵 진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반영
 - 철강재 3천t은 한·미·중·러 4개국이 북한의 핵 신고와 불능화 이행에 대한 상응조치 차원에서 북에 제공하고 있는 총 중유 95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 지원 중 한국이 맡기로 한 물량의 일부로써 9~10월 중 철강재를 보내기로 하고 생산절차를 진행했지만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지연에 반발한 북한이 불능화를 중단하고 핵시설 원상복구에 들어가자 일단 생산이 완료될 때(10월 하순)까지 기다렸다가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었음.
 - 그럼에도 정부가 검증의정서 채택을 위한 차기 6자회담 결과를 본 뒤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현재 북핵 상황의 가변성을 감안한 포석으로 풀이



● **뉴질랜드, 대북 중유지원 논의 중(10/30, 자유아시아방송)**

- 뉴질랜드 정부가 대북 중유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북핵 6자 회담 참여국들과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미국 주재 뉴질랜드 대사관이 발표
- 대사관 대변인은 30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현재 6자회담 당사국들과 뉴질랜드 정부가 중유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논의단계’에 있다고만 밝힐 수 있다”고 밝힘. 뉴질랜드 대사관 대변인은 “(뉴질랜드가) 단독으로 참여할지, 아니면 현재 지원을 검토중인 호주와 공동으로 참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언급
- 이와 관련, 제임스 편넬 뉴질랜드 외교장관 수석 비서는 “뉴질랜드가 내달 8일 총선을 앞둔 만큼 북한에 중유를 지원하는 문제는 새로 들어설 행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고 RFA는 보도
- 일본 정부가 일본인 납북 문제의 미해결을 이유로 2·13합의와 10·3 합의에 따른 대북 중유 지원 분담료 20만t의 집행을 거부함에 따라 6자회담 참가국들은 호주와 뉴질랜드 등 제3국의 대납 방안을 모색

● **힐, 6자회담 비참가국 北에 중유제공 의사 밝혀(10/29, 연합)**

- 북핵 6자회담 당사국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나라들이 일본 대신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8일 언급
- 힐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에서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만난 뒤 이 같이 밝히고, 호주의 참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몇몇 다른 나라들이 북한에 중유를 제공하는 방안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언급, 그러나 어떤 국가들이 중유 제공을 자원했는지는 밝히지 않음. 그는 이어 “이들과 협의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중유 제공을 끝마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

● **6자회담 일러야 11월 중순 가능(10/27, 연합)**

- 북핵 검증의정서 채택을 시도할 차기 6자회담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내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 베이징의 외교소식통들은 27일 “차기 6자 수석대표 회담은 처음에는 제7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가 끝나는 이번 주에 개최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시기가 다소 늦춰졌다”면서 “10월 8일까지는 불가능하며 일러도 11월 10일 이후에나 개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표명



나. 북·미 관계

● 北·美 과학자교류 추진…美대표단 방북(11/1,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정보기술(IT)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과학자대표단이 북·미 양국 정부의 후원아래 이르면 2009년 1월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
- 방송에 따르면 미국의 과학진흥협회와 시라큐스대, 민간연구개발재단, 코리아소사이어티 등이 주축이 돼 구성된 ‘미국과 북한간 과학 교류를 위한 컨소시엄’이 이번 방북을 추진, 한 핵심 관계자는 “미국 과학자들은 이번 북한 방문을 통해 북한 과학 기술의 현황에 대해 북한 과학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미국과 북한 과학자들간 교류를 늘리는 방안에 관해 함께 토론을 벌일 계획”이라고 언급하고 또 “방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냈고 북한측의 승인만 남은 상태”이나 “미국과 북한간 핵협상과 같은 정치환경에 영향을 받을 변수는 있다”고 강조
- 앞서 10월 28일 한 세미나에서 북한의 김책공대와 교류하는 시라큐스대의 스텐튼 토슨 교수는 “컨소시엄 차원에서 북한의 유엔대표부와 미국 과학자들의 방북을 논의해 왔다”며 “북한도 양국 과학자간 교류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미국무부도 이번 방북에 매우 협조적이고,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도 이번 교류에 관여해왔다”고 설명
- 2007년 5월 시라큐스대를 비롯한 미국내 9개 대학과 비정부 기구, 의회, 국무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 토론회를 계기로 구성된 이 컨소시엄은 2008년 2월 보스턴에서 열린 2008 미국과학진흥협회 연차 총회에 김명길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공사를 초청, 양국 과학자들간 교류 활성화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음.

● 성김 내주 뉴욕서 리근 접촉(11/1, 연합)

- 미 국무부 손 매코맥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일행의 대표인 리 국장이 김계관(외무성 부상)의 차석자인 만큼 우리측에서는 김 특사가 그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언급, 매코맥 대변인은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동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제 힐 차관보와 마주칠 기회가 있어 그 문제를 물어보았다. 아마 김 특사가 가게될 것”이라고 답변
- 이와 관련,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미 국무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기 때문에 힐 차관보가 뉴욕으로 건너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
- 리 근 국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은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 도널드 자고리아 헌터대 교수 등의 초청을 받아 11월 7일께 뉴욕을 방문, 학술회의 등에 참석할 예정, 리 국장의 방미는 북미 민간차원 교류인 이른바 ‘트랙 투’ 형식을 띠게 되며, 학술회의에는 에번스



리비아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 윌리엄 페리 전 대북정책조정관,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등이 참석하게 될 것으로 알려짐.

- **北주민들, 美의회대표단에 식량지원 사의(10/29, 자유아시아방송)**
 - 미 의회대표단이 20~24일 북한 평양을 방문해 미국의 대북 지원 식량 분배 현황을 살펴봤으며, 북한 주민들은 이들에게 “매우 고맙다”는 뜻을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
 - 방송은 미 의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 상원 세출위원회 산하 농업소위원회에 소속한 민주당과 공화당 전문위원 5명으로 구성된 의회대표단이 평양 북동부 지역의 탁아소와 학교, 병원 인근에 설치된 식량배급소를 둘러봤으며 분배 현황을 담은 기록도 살펴봤다고 보도, 의회 관계자는 대표단이 북한 주민들을 직접 만날 수도 있었다면서 북한 관리들이 “협조적”이었다고 말하고 “식량을 분배받은 북한 주민들이 미 의회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통역을 통해 미국의 식량 지원에 대해 매우 고맙다는 뜻을 전하는 것을 보고 매우 좋은 조짐이라고 느꼈다”고 언급
 - 그는 또 ‘사건’임을 전제로 “미 의회 대표단은 이번 방북을 통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이 절실하고 미국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의 가치를 알 수 있었다”고 밝힘.
 - 대표단의 방북 실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께 보고서 형태로 의회에 제출된 뒤 향후 미국의 추가적인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한 예산 배정 여부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방송은 보도

다. 북·중 관계

- **북한군 친선참관단이 1일 귀환(11/1, 조선중앙방송)**
 - 김춘삼 상장(중장급)을 단장으로 한 북한군 친선참관단이 1일 귀환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北·中, 압록강·두만강 수리협력회의록 조인(10/29, 조선중앙통신)**
 - 북한 기상수문국 대표단과 중국 수리부 대표단 사이에 압록강, 두만강의 수문사업협조에 관한 회담록이 29일 평양에서 조인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조인식에선 북한측에서 고일훈 기상수문국장이, 중국측에서 방북중인 류녕 수리부 총정공사가 서명
- **中, 김정일 입원 소식 모른다고 언급(10/28, 중국 외교부 대변인)**
 - 중국 외교부는 28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입원설과 관련해 아는 바 없다고 답변,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가 김정일 위원장이 입원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런



소식을 들은 바 없다”면서 “어떤 논평도 할 수 없다”고 답변

라. 북·러 관계

- 2009년 4월 평양에 러시아문화센터 개설(10/30, 러시아의소리방송)
 - 러시아 말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러시아문화센터가 2009년 4월 평양에 들어설 예정이라고 러시아의 소리방송이 30일 보도
 - 러시아세계기금의 게오르기 톨로라야 지역국장은 평양외국어대학 행정부와 센터 개설에 합의했다면서 문학서적과 컴퓨터, 영화 교재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그는 또 중학교(중고교)용 러시아교과서를 출판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을 북측에 접수했다고 밝힘.
 - 방송은 “러시아세계기금은 외국에서 러시아어와 러시아문화 전파를 위해 지난해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직됐다”고 설명

마. 북·일 관계

- 北, 납치 재조사 거부입장 전달한 적 없어(10/3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31일 북한이 중국에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재조사 거부 입장을 전달했다는 일본 산케이 신문의 보도를 부인, 조선신보는 ‘언론을 통해 보는 조선의 대일 관점’ 제목의 기사에서 조(북)일관계 소식통을 인용, “조중사이에 그러한 이야기가 오고간 적이 없다”며 “교착상태의 책임을 조선측에 들씌우고 조선에 대한 압력 강화를 합리화하기 위한 정보조작의 성격이 짙다”고 주장
 - 산케이 신문은 이날 북일관계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이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에서 합의한 납치문제 재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중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
 - 조선신보는 북한 외무성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조·일 현안 해결에서 진전이 없는 것은 일본측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일본에서 정권이 어지럽게 교체된 최근 몇년간의 정무간 협상은 시간낭비밖에 되지 않았다”고 교착상태의 일본 책임론을 강조
 - 조선신보는 북한과 일본간 이뤄진 “선양 합의는 조일간에 상정.토의된 문제들을 이행하겠다는 후쿠다 수상 의향을 전제로 했을테지만 그는 손도 안뉘고 돌연히 사임했다”며 “9월 이후 조선측은 후임자인 아소 수상의 언동을 지켜보았을 것인데 정책계승의 뚜렷한 신호는 일본측에서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北, 日 납치문제 제기에 ‘과거청산’ 대응(10/28, 노동신문; 민주조선)
 - 노동신문은 28일 ‘정치 사기꾼들의 잔망스러운 흥정 놀음’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북일 국교정상화 조건으로 납치문제를 계속 내세우면 북일관계가 “악화의 길만을 걷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신문은 “조일(북일) 국교정상화 실현에 앞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가 바로 과거 청산”이라고 강조



- 민주조선도 ‘부질없는 대결 소동으로 차려질 것은 자멸뿐이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납치문제를 이유로 대북 제재조치를 연장한 것은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파탄시키고 조일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킴으로써 저들의 군사 대국화, 해외 침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바. 기타외교 관계

● 北 모리셔스 대사에 안희정 임명(11/1,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일 안 대사가 10월 23일 아니루드 쥬그노스 모리셔스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인사를 전달했다고 보도, 안 대사는 나미비아, 잠비아, 보츠와나 대사도 겸임
- * 북한과 모리셔스는 1973년 3월 수교

● 유럽국가 수교 60돌 친선모임(10/31, 조선중앙통신)

- 박의춘 북한 외무상은 30일 동유럽 국가들과 외교관계 설정 60주년을 기념해 주북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대사관원과 슬로바키아, 헝가리 외무부 대표단을 초대한 가운데 친선모임을 마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앞서 박 외무상은 10월 26일 루마니아와 수교 60주년을 기념한 축전을 라자르 코마네스쿠 외무장관에게 보냈다고 통신은 보도

● 北 평양서 ‘유엔의 날’ 기념연회 개최(10/30, 조선중앙통신)

- 북한 평양에서 29일 장 피에르 드 마저리 세계식량계획(WFP) 평양사무소장이 ‘유엔 임시대리상주조정자’ 자격으로 ‘유엔의 날’(10.24) 기념연회를 주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 연회에는 북한 외무성에서 국제기구를 담당하는 박길연 부상과 북한 주재 각국 대사관 관계자와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
- 유엔의 날인 10월 24일 조선중앙방송은 “우리나라는 유엔 성원국으로서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유엔 현장의 목적과 원칙에 맞게 공정한 국제관계를 수립하는 데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보도
- 한편 마저리 소장은 곧 WFP 평양사무소장에서 이임하고 토빈 듀신임 사무소장이 부임할 예정

● 김영남, 미얀마 외무장관 면담(10/29,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방북 중인 니얀 윈 미얀마 외무장관을 만나 환담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니얀 윈 장관은 이 자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선물을 전달



● 브라질, 북한에 대사관 개설 추진(10/27, 연합)

- 브라질 정부가 평양에 대사관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현지 일간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가 27일 보도, 브라질 외무부는 구체적 시기를 밝히지는 않은 채 평양 주재 대사관 개설 추진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번 결정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적극 합류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발표

* 북한과 브라질은 지난 2001년 3월 수교 이후 2004년 9월부터 상주 대사관 개설을 추진해 왔으며, 브라질 정부가 대사 파견을 위한 아그레망(승인)을 승인한 뒤인 2005년 6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박혁을 브라질 대사로 임명하고 대사관을 공식 개설

3. 대남정세

● 金통일, ‘남남갈등’ 방지가 가장 중요(10/31, 연합)

-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31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화여대 북한학과 10주년 기념 특강에서 대북 대화 제의와 남북간 교류협력 등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남남갈등의 방지”라고 주장, 김장관은 “지금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남(南南)갈등으로 인한 국론분열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전에는 남북관계 때문에 남남갈등이 많았는데 금년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강조

● 구호단체 JTS, 北에 밀가루 500t 지원(10/31, 연합)

- 국제구호단체인 JTS(이사장 법륜 스님)는 북한의 강원도 주민에게 긴급식량을 지원하기 위해 31일 오전 인천항을 통해 밀가루 500t(4억원 상당)을 북한의 남포항으로 보냄
- 2만5천 포대에 나뉘어 담긴 밀가루는 이튿날 남포항에 도착해 강원도 원산시의 육아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어린이와 양로원 노인들에게 100t, 법동군과 고산군, 통천군, 세포군 주민들에게 각 100t이 전달될 예정

● 평양대마방직 참관단 대규모 방북(10/29, 연합)

- 남한 기업과 북한측이 공동 투자·경영하는 평양대마방직의 준공식 참석을 위한 남측의 대규모 참관단이 29일 오전 아시아나 전세기편으로 북한을 방문, 방북단은 남북경협관련 기업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은행 등 관계자들과 천주교 작은형제회원 등 257명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이 포함
- 평양대마방직은 안동대마방직(회장 김정태)과 북측 새별총회사(총회장 리명준)가 절반씩, 총 3천만 달러의 자본금을 공동 투자해



평양 선교구역 영제동에 세운 섬유 및 물류회사로 부지 4만7천㎡에 1천명 내외의 북한 근로자가 일할 예정

● **北 개성서 남·북 강원도 교육교류 실무회담(10/29, 연합)**

- 강원도교육청은 29일 북한 개성을 방문해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등과 남·북 강원도 교육분야의 교류를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 이날 회담에는 도교육청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남북 강원도협력협회 등 남측 관계자 5명이 참석, 북측과 교사 및 학생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

● **北단체, 전공노 방북 불허 비난(10/28, 조선직업총동맹 대변인 담화)**

-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은 28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관계자들의 방북을 불허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비정상적인 사태”라고 비난, 그는 촛불시위를 주도한 단체 관계자에 대한 구속 움직임을 “북남관계 파탄과 민생도탄의 책임을 떠 돌리고 통치위기를 수습해보려는데 그 검은 속셈이 있다”면서 남한 주민들의 ‘반정부 투쟁’을 선동

* 정부는 최근 남북노동교류협력사업차 방북신청을 한 민주노총 대표단 30명 가운데 전공노 소속 3명에 대해 우리 공무원들의 방북이 자제되고 있다는 점과 신변안전 문제를 고려해 방북을 불허

● **金국정원장, 김정일, 업무에 큰 지장없어(10/28, 연합)**

- 지난 8월 뇌 수술 후 회복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짐.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은 28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신체적으로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처리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전언
- 김 원장은 최근 김 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이 지난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뇌신경외과 전문의를 만났고 이후 이 의사가 평양으로 향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김정남의 프랑스 방문은 사실이라고 본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
-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와 관련, 그는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며 통일부도 자제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제한 뒤 “삐라로 (북한 내부에) 큰 변화가 감지된 것은 없으나 (삐라 내용은) 북한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으로, 북한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답변

● **통일부, 남북합의 감안, 삐라살포 자제 요청(10/28, 통일부)**

- 정부는 28일 북한이 거둬들 문제삼고 있는 민간 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에 대해 “남북간 여러 합의를 감안할때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전날 남북군사실무접촉에서 뼈라 살포 중단을 요구한 것과 관련, 이 같이 말하고 27일 오후 관계 부처 국장급 회의를 갖고 이런 기본 인식에 뜻을 같이 했다고 소개

*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고 2004년 남북장성급회담 합의서에는 그해 6월15일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음.

● 부산·경남NGO, 北에 ‘햇빛발전소’ 건립 추진(10/28, 연합)

-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내년 상반기 중에 북한 평양에 500kW급 햇빛발전소(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발표, 500kW급 발전소는 최근 북한의 전력사용 상황을 고려하면 6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공급

● ‘통일문학’ 2호도 진통 끝에 남측 반입(10/28, 연합)

- 올해 창간된 남북 첫 공동문학잡지 ‘통일문학’이 창간호에 이어 제2호도 일부 문구 수정의 진통 끝에 발간 3개월 만에야 남측으로 들어옴.
- 남과 북, 해외의 문인들이 결성한 6·15민족문학인협회의 남측협회(회장 염무웅)는 남북 문인들이 공동 집필해 지난 7월31일 북측에서 발행된 ‘통일문학’ 2호가 10월초 당국의 승인을 받고 국내 반입됐다고 28일 발표
- 8월 7일 개성에서 북측협회로부터 전달받은 ‘통일문학’ 2호 1천부는 잡지 속 일부 문구를 이유로 통일부의 반입 승인을 받지 못해 그동안 도라산 세관에 압류돼 왔는데 최근 문제의 문구를 종이 테이프로 가리는 조건으로 반입이 승인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뉴질랜드, 대북 중유지원 논의중”(10/30)

- 뉴질랜드 정부가 대북 중유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북핵 6자회담 참여국들과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미국 주재 뉴질랜드 대사관이 밝혔다. 대사관 대변인은 30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현재 6자회담 당사국들과 뉴질랜드 정부가 중유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논의단계’에 있다고만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 일본 정부가 일본인 납북 문제의 미해결을 이유로 2.13합의와 10.3 합의에 따른 대북 중유 지원 분담금 20만t의 집행을 거부함에 따라 6자회담 참가국들은 호주와 뉴질랜드 등 제3국의 대납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뉴질랜드 대사관 대변인은 “(뉴질랜드가) 단독으로 참여할지, 아니면 현재 지원을 검토중인 호주와 공동으로 참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힐 “6자회담 비참가국 北에 중유제공 의사 밝혀”(10/29)

- 북핵 6자회담 당사국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나라들이 일본 대신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할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8일 밝혔다.
- 힐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에서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만난 뒤 이 같이 밝히고, 호주의 참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몇몇 다른 나라들이 북한에 중유를 제공하는 방안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국가들이 중유 제공을 자원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음. 그는 이어 “이들과 협의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중유 제공을 끝마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北리근, 방미중 美성김 만날 듯”<RFA>(10/29)

- 내달 7일 미국을 방문하는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이 방미기간 성 김 미국 국무부 북핵담당 특사와 만날 것으로 알려져 두 사람의 회담 결과가 북핵 6자회담 재개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
- ‘북핵 협상에 정통한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는 “성김 특사가 최근 미북간 합의된 검증의정서 가운데 아직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기술



적인 부분을 놓고 리근 국장과 집중적으로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이 문제의 해결 여하에 따라 6자회담 재개 일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 이 관리는 “북미가 최근 합의한 검증안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부속 합의서가 있으며, 여기에는 영변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의 시료 채취를 비롯해 북한이 합의한 검증 절차의 세부 사항이 기록돼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현재 핵심 문제는 핵폐기물 시설같은 영변내 핵의혹 시설에 대한 접근을 북한이 과연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양해 사항이 있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 엘바라데이 “북한 NPT 복귀 환경 조성되길”(10/28)

-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7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북한이 곧 NPT에 복귀하고, IAEA의 포괄적인 안전 규칙을 다시 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여전히 희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2003년 NPT 탈퇴를 선언했던 북한은 이달초 미국과 비핵화 절차를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IAEA 요원들이 영변 핵시설에 접근해 장비를 재봉인하고 감시 카메라를 재가동하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북한의 신상철 유엔 대사는 총회에서 IAEA가 여전히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이 IAEA와 관계를 정상화할 준비가 돼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다.

● 힐-사이키 美日 6자수석대표 회담(10/28)

- 미 국무부는 미국과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28일 워싱턴에서 만나 일본인 납치와 대북 중유지원 문제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손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8일 워싱턴에서 6자회담 일본 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을 만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매코맥 대변인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이 파리에 나타났다는 일본 방송의 보도와 관련, 김정남의 소재를 모른다면서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 “6자회담 일러야 11월 중순 가능”(10/27)

- 북핵 검증의정서 채택을 시도할 차기 6자회담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내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 베이징의 외교소식통들은 27일 “차기 6자 수석대표 회담은 처음에는 제7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가 끝나는 이번 주에 개최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시기가 다소 늦춰졌다”면서 “내달 8일까지는 불가능하며 일러도 11월 10일 이후에나 개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나. 미·북 관계

● 클링너, 북핵검증 10가지 추궁과제 제시(11/2)

-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미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해 주면서 이끌어낸 북핵 검증합의는 북한의 압력에 굴복한 또 다른 사례라고 주장. 클링너 연구원은 31일 헤리티지 재단 웹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미 행정부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대치를 해소하기 위해 내용이 빈약한 합의를 수용한 셈”이라며 10.11 북핵검증 합의와 관련해 미 의회가 추궁해야 할 10가지 문제점을 제시.
- 그는 먼저 리비아가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기 전에 1988년 스코틀랜드 로커비에서 발생한 미 팬암기 폭탄테러 사건에 관여했음을 인정했는데 왜 북한은 115명의 목숨을 앗아간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지를 따져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지 부시 대통령은 2006년 북한이 다른 국가에 핵무기를 이전할 경우에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시리아에 핵기술을 이전한 북한에 대해 어떤 처벌이 가해졌는지도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북핵검증 합의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이 축소된 점 ▲부속합의와 구두합의에 구속력이 있다고 북한이 동의했는지 여부 ▲유엔결의안 1718호 등에 견주어 낮은 수준의 합의에 이르게 경위도 추궁대상으로 꼽았음.
- 지난 6월 북한의 핵신고서에 핵폐기장, 무기제조 시설, 고폭실험 시설 등의 정보가 포함됐는지, 2005년 9월 북한이 핵포기에 합의한 이후 이들 무기를 폐기하는데 협상의 진전이 있었는지, 불능화의 대상은 북한의 모든 핵시설에서 ‘영변’ 한곳으로 좁혀진 것인지도 의회의 ‘검증’을 받아야할 사안이라고 클링너 연구원을 밝혔다.

● “北, 광산업 기반 경제성장 가능” <美전문가>(11/1)

- 북한이 개방정책을 통해 대외관계 개선에 나설 경우 광산업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미지질조사국(USGS)의 데이비드 멘지 박사가 전망했다고 미국의 소리(VOA)이 1일 보도.
- 멘지 박사는 북한의 광산업이 지난해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1.4%를 차지해 다른 나라들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산업의 비중이 큰 점을 지적, 이같이 말하고 “북한은 광물자원이 특별히 풍부하지는 않지만 일부 자원을 더 개발하면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이들 천연자원을 단순히 수출하는 데서 나아가 가공해 수출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그러나 광산업은 채굴이나 재처리 시설, 수송을 위한 도로 등 기반 시설과 에너지 등 많은 자본이 소요돼 북한 단독으로는 발전이 어려운 만큼 “북한은 적극적인 개방 정책으로 한국과 중국 등으로부터 합작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멘지 박사는 강조했다.
- 그는 북한의 광산업이 중국 경제와 직결돼 있어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중국과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이 계속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할 것이므로 광물 자원에 대한 수요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음.

● “美 새대통령에 키신저.페리 파북안 건의”<RFA>(11/1)

- 미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 수개월내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이끄는 초당적 대표단을 북한에 보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
- 이는 지난 1999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윌리엄 전 장관을 북한 정책조정관으로 임명, 윌리엄 전 장관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뒤 그해 10월 제출한 북핵 해법에 관한 ‘페리 보고서’를 대북정책의 지침으로 활용했던 전례와 유사한 것.
- 비영리 외교전문 두뇌집단인 NCAFP는 오는 7일 뉴욕에서 리 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도 참석하는 비공개 북핵 토론회를 가진 직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초당적 대표단의 파견안을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
- NCAFP의 도널드 자고리아 프로젝트 국장은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만 말했으나, “정통한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주최측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수개월내 키신저, 페리 전 장관을 북한에 보내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이 방송은 설명했다. 대표단은 방북 논의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약속하면 미국은 그 대가로 북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정치.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이정표’를 차기 대통령에게 건의하게 됨.

● 北.美 과학자교류 본격 추진..美대표단 1월 방북(11/1)

- 미국의 정보기술(IT)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과학자대표단이 북·미 양국 정부의 후원아래 이르면 내년 1월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
- 방송에 따르면 미국의 과학진흥협회와 시라큐스대, 민간연구개발재단, 코리아소사이어티 등이 주축이 돼 구성된 ‘미국과 북한간 과학 교류를 위한 컨소시엄’이 이번 방북을 추진하고 있음. 한 핵심 관계자는 “미국 과학자들은 이번 북한 방문을 통해 북한 과학 기술의



현황에 대해 북한 과학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미국과 북한 과학자들간 교류를 늘리는 방안에 관해 함께 토론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방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냈고 북한측의 승인만 남은 상태”이나 “미국과 북한간 핵협상과 같은 정치환경에 영향을 받을 변수는 있다”고 말했다.

● 美국무부 “성김 내주 뉴욕서 리근 접촉”(11/1)

- 성 김 미 국무부 북핵특사가 내주 뉴욕을 방문하는 리 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을 만날 예정이어서 6자회담 재개문제와 핵검증 이행방안에 관한 진전이 이뤄질지 주목됨.
- 미 국무부 손 매코맥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일행의 대표인 리 국장이 김계관(외무성 부상)의 차석자인 만큼 우리측에서는 김 특사가 그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동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제 힐 차관보와 마주칠 기회가 있어 그 문제를 물어보았다. 아마 김 특사가 가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 리 근 국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은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 도널드 자고리아 헌터대 교수 등의 초청을 받아 7일째 뉴욕을 방문, 학술회의 등에 참석할 예정. 리 국장의 방미는 북미 민간차원 교류인 이른바 ‘트랙 투’ 형식을 띠게 되며, 학술회의에는 에번스 리비어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 윌리엄 페리 전 대북정책조정관,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등이 참석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 볼턴-켈리 6자회담 유용성 공방(10/31)

- 미국의 정권이양기를 앞두고 새 행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북한 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유용성 문제를 놓고 미국 내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와 온건파가 맞붙었음. 매파인 존 볼턴 전 유엔대사와 제2차 북핵위기 발생시점에 국무부에서 활동했던 제임스 켈리 전 동아태 차관보가 ‘38선의 대치’라는 주제로 미 기업연구소(AEI) 주최 토론에서 공방을 벌인 것.
- 30일 AEI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토론내용에 따르면 볼턴은 “6자회담의 기본적인 결함은 북한의 핵무기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음. 또 볼턴은 “미국은 6자회담 시작 때부터 전술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프로그램에만 초점을 맞추므로써 남한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 화학, 생물학 무기는 물론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를 북한이 아무런 시비도 받지 않은 채 보유할 수 있게 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핵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은 북한의 정권을 제거하는 길밖에 없다”며 “이런 목표를 위해 미국은 북한이 대량살상 관련 무기와 재료를 수출입하지 못하도록



틀어막아야 하며, 국제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을 다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에 맞서 켈리 전 차관보는 “6자회담은 그래도 미국의 이익에 여전히 유용하며, 차기 행정부 정책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북한내부의 변화가 없이는 협상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는 어려워보이지만 6자회담은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가치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음. 켈리는 “혹자는 6자회담 프로세스 및 북한과의 다른 협상을 포기하고 좀 더 거친 방법을 강구하라고 주장할지 모른다”며 “그러나 강력한 전술은 (6자회담보다) 나은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끈기와 조용한 결단, 요란하지 않은 동맹과의 공조는 떠벌림이나 협박,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제재보다 미국의 이익에 더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북 정권의 ‘건강상태’ 진지한 평가 필요” <美연구원> (10/30)

- 브루킹스연구소의 오공단 비상임 선임 연구원과 미국 국제정책센터(CIP) 아시아프로그램 책임자인 셸리그 해리슨은 30일 각각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오공단 선임 연구원은 김정일 부자가 60년에 걸쳐 자초한 고립, 경제적 파탄 및 정치적 압제 이후 북한 사회는 지도자와 마찬가지로 병든 상태라며 북한 정권의 건강상태에 대해 지금 진지한 평가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
- 오 선임 연구원은 또 북한으로부터 지난 20년간 개발해온 핵물질을 제거하거나 자세한 자료를 받는 것은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발생 가능한 정권의 붕괴에 대비하는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차기 미국 대통령은 ▲후계문제 ▲핵문제 ▲정권변화가 북한 국내 질서에 미칠 영향 ▲북한 정권변화가 동북아의 미묘한 정세에 미칠 영향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 오 연구원은 특히 김정일 사망 뉴스가 나올 경우 북한 국민들 내 광범위한 사회 동요가 일어날 듯 하지만 혁명이나 대규모 시위보다는 더 나은 경제적 여건을 추구하는 들뜬 움직임이 될 것으로 내다봤음.

● “北주민들, 美의회대표단에 식량지원 사의” <RFA> (10/29)

- 미 의회대표단이 20~24일 북한 평양을 방문해 미국의 대북 지원 식량 분배 현황을 살펴봤으며, 북한 주민들은 이들에게 “매우 고맙다”는 뜻을 밝혔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 방송은 미 의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 상원 세출위원회 산하 농업소위원회에 소속한 민주당과 공화당 전문위원 5명으로 구성된 의회대표단이 평양 북동부 지역의 탁아소와 학교, 병원 인근에 설치된 식량배급소를 둘러봤으며 분배 현황을 담은 기록도 살펴봤다고 전했다.



- 의회 관계자는 대표단이 북한 주민들을 직접 만날 수도 있었다면서 북한 관리들이 “협조적”이었다고 말하고 “식량을 분배받은 북한 주민들이 미 의회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통역을 통해 미국의 식량 지원에 대해 매우 고맙다는 뜻을 전하는 것을 보고 매우 좋은 조짐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 “北 올해 식량부족분 50만~80만” <美전문가>(10/28)

-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은 최소 50만t에서 최대 80만t가량 될 것이라고 미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샌디에이고 캠퍼스의 스티븐 해저드 교수가 28일 주장. 북한경제와 식량문제 전문가인 해저드 교수는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올해 북한에 흉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지적, 북한의 “올 가을 수확량은 2006년과 2007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추정했음.
- 올해 초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올해 식량부족량을 166만t 정도로 봤으나 해저드 교수는 “만일 올해 북한이 100만t 이상의 식량이 부족했다면 올해 봄 춘궁기부터 이미 대량아사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유니세프, 내년 10월 北아동 영양실태 조사(10/28)

-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이 북한 어린이들의 만성적인 영양부족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10월 북한 당국과 공동으로 북한의 7개 도와 1개 자치도시의 4천800가구를 대상으로 영양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고팔란 발라고팔 유니세프 평양사무소 대표가 말했다.
- 유니세프는 북한에서 1998년부터 2년에 한 차례씩 7세 미만 어린이와 24개월 이하 영아를 가진 여성의 영양상태를 조사하다 북한 당국의 비협조 때문에 2004년을 마지막으로 중단했었음. 발라고팔 대표는 내년 조사 결과를 5년전 조사와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 2004년 조사기간과 동일한 10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10일간 평양과 양강도에 이르는 북한 전역에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

● 리근 美대선 직후 뉴욕 방문(10/28)

- 미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리 근 외무성 미국국장은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 도널드 자고리아 헌터대 교수 등의 초청을 받아 뉴욕을 방문, 학술회의 등에 참석할 예정. 이 소식통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지는 잡혀있지 않으나, 빠르면 5일 늦어도 7일께 리 국장 일행이 뉴욕에 올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NCAFP측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리 근 국장이 뉴욕에 온다는 사실은 확인해 줄 수 있으나 언제 오고 어디에 머물게 될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우리는 리 국장 일행과 만남을 갖게 될 것이며, 기자회견도 예정하고 있으나 추후 알려주겠다”고 답했음.



● UNFPA “한국과 北인구센서스 주요과정 협의”(10/27)

- 북한의 인구주택총조사(인구센서스, 10.1~15)에 기술적 자문을 한 유엔인구기금(UNFPA)은 이 조사에 자금을 지원한 한국 정부의 유엔대표부측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조사 주요과정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UNFPA는 27일 연합뉴스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인구센서스 결과가 나오면 남북협력기금에서 400만달러를 지원한 한국 정부에도 보고서로 제출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북한 당국과 UNFPA는 1993년 이후 15년만에 실시한 이번 조사를 위해 3만5천200명의 현장 조사요원과 7천500명의 지도요원 및 10여명의 UNFPA 관계자를 투입했다.

다. 중·북 관계

● 中 축구계서 ‘북한축구 모델’ 논란(10/30)

- 세계 수준에 도달한 북한 여자축구팀에 이어 북한 남자축구팀까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최종예선에 진출, 중국보다 나은 성적을 낸 북한의 소수정예식 국가주도의 축구정책을 따라가야 하느냐가 논란의 핵심. 논란은 중국 축구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추이다린(崔大林) 국가체육총국 부국장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 30일 중국 축구보(足球報)에 따르면 최 부국장은 최근 과학적발전관 실천대회 참석차 중국축구협회를 찾은 자리에서 “현재 중국 축구의 가장 큰 모순은 날로 증가하는 군중의 요구에 비해 축구 수준이 뒤떨어져 있는 것”이라며 북한 축구를 본보기 사례로 되풀이해서 언급한 데서 비롯됐다. 그는 “북한은 거국적 시스템을 운영해 여자축구 수준을 세계 일류로 만들었으며 남자축구도 괜찮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최 부국장의 이같은 발언은 중국 축구계도 프로축구를 도입하는 개혁을 단행했지만 축구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망감을 표출하는 동시에 향후 중국 축구계의 개혁을 암시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하지만 그의 발언에 대한 축구계의 반응은 냉소적.

● 中 “김정일 입원 소식 모른다”(10/28)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가 김정일 위원장이 입원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런 소식을 들은 바 없다”면서 “어떤 논평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아소 총리는 28일 일본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 상황과 관련,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정보가 있다”면서 “별로 상황은 좋지 않지만 판단이 전혀 가능하지 않은 상황으로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라. 일·북 관계

● “北, 납치 재조사 거부 中에 통보”(10/31)

- 북한이 지난 8월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에서 합의한 납치문제 재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중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31일 보도. 신문은 복수의 북일관계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북한의 이런 방침은 중국 정부를 통해 일본 정부에도 전달됐다고 말했다.
- 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 고위관리가 지난달말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총리 사임 이후 북한 정부 고위 관리와 만난 자리에서 납치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북한 관리는 “설령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조사를 한다고 하자. 하지만 일본 국민은 무슨 결과가 나와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북한에 의한) 재조사는 메리트가 없다”고 말했다.
-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위해 대북 추가 제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와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측의 동향을 봐가면서 추가 제재 부과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日 교수 “北 주민 ‘뭔가 일어났다’고 생각”(10/30)

-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근황을 둘러싸고 다양한 관측이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가 이같이 밝혔다. 30일 AFP통신에 따르면 와다 명예교수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다. 방북은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조교수 및 일부 지한파 인사들과 함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 목적은 북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물밑작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음.
- 와다 명예교수는 “김정일 위원장이 와병 중인 것은 분명하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그가 미국과의 협상을 이끌고 지시를 내린다는 점에서 그의 건강 상태는 아직 괜찮은 상황이라는 것이 나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북한 정권은 주민들에게는 이런 정보를 감추고 있다. 그러나 (평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김 위원장이 9월 9일(정권수립 60주년) 기념행사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며 “따라서 주민들은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소개했음.

● 北, 日 납치문제 제기에 ‘과거청산’ 대응(10/28)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일본이 북일 국교정상화 조건으로 납치문제를 계속 내세우면 북일관계가 “악화의 길만을 걷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정치 사기꾼들의 잔망스러운 흥정



높음' 제목의 논평에서 "조일(북일) 국교정상화 실현에 앞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가 바로 과거 청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북한의 내각기관지 민주조선도 '부질없는 대결 소동으로 차려질 것은 자멸뿐이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납치문제를 이유로 대북 제재조치를 연장한 것은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파탄시키고 조일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킴으로써 저들의 군사 대국화, 해외 침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조일관계의 기본은 과거청산"이라며 "성근한(성의있는) 반성과 응당한 배상"을 요구했다.

마. 러·북 관계

● "내년 4월 평양에 러시아문화센터 개설"(10/30)

- 러시아 말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러시아문화센터가 내년 4월 평양에 들어설 예정이라고 서울에서 수신된 러시아의 소리방송이 30일 보도. 러시아세계기금의 게오르기 톨로라야 지역국장은 평양외국어 대학 행정부와 센터 개설에 합의했다면서 문학서적과 컴퓨터, 영화 교재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은 전했다. 그는 또 중학교(중고교)용 러시아교과서를 출판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을 북측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 이 방송은 "러시아세계기금은 외국에서 러시아어와 러시아문화 전파를 위해 지난해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직됐다"고 설명했다.

바. 기타

● '8월 북한機 印영공 통과취소는 美 요청 따른 것' <WSJ>(11/2)

- 지난 8월 이란으로 갈 예정이던 북한 항공기의 인도 영공 통과를 인도 정부가 막은 것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우려한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 보도.
- 지난 8월7일 미얀마 만달레이 공항에서 이란으로 향할 예정이던 북한 고려항공 소속 IL-62기가 인도 영공을 통과하는 것을 승인받았다가 갑자기 인도 당국에 의해 통과가 취소돼 이륙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 신문은 이와 관련, 서방과 아시아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워싱턴의 요청에 의해 북한기의 인도 영공 통과가 막혔다고 전하면서 백악관이나 인도 총리실 관계자들은 이 조치의 배경이나 비행기에 실린 화물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소식통들은 이 조치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일환이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방의 한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프로그램에 따라 인도에 조치를 요구했다면서 고려항공 비행기는 이란으로 갈 예정이었고 북한은 이란과 시리아에 미사일을



공급해왔다고 주장했다.

- 신문은 미국의 외교관들이 대화가 북핵 확산을 막는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미국의 적국들과 북한의 연대에 관한 우려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이란이나 시리아, 리비아 같은 국가에 미사일 관련 기술을 제공해왔다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 김정일 치료설 佛의사 “난 모르는 일..평양 안갔다”(10/31)

-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치료를 위해 최근 평양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의 뇌신경외과 전문의 프랑수아-사비에 루(57)가 30일 이러한 보도 내용을 부인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최근 파리에서 북한 공관이 제공한 차량으로 공항에 갔으며, 앞서 2-3일 전 김 위원장의 아들인지는 모르겠으나 김(Kim)이라는 성을 가진 한국인이 자신을 찾아왔었다고 시인했다.
- 파리 소재 생트-안 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은 루는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이뤄진 AP통신과의 통화에서 일본 후지TV가 루 과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평양행 화면을 방송한 데 대해 “난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AP가 31일 보도.
- 루 과장은 자신이 뇌신경학 전문의 회의차 베이징에 왔으며, 최근 평양에 갔던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루 과장은 자신이 베이징으로 올 때 파리 주재 북한 유네스코대표부 차량이 그를 샤를 드골 국제공항으로 데려다 줬다는 앞서 후지TV의 보도는 확인했다. 루 과장은 “그들은 누군가를 데리러온 것 같았는데 나에게 (공항으로) 데려다 주면 도움이 되겠냐고 친절히 물어왔다”면서 “이것은 내가 그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해온데다 2-3일 전에도 한 한국인을 만난 사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한국인을 ‘대략 1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위해 프랑스에 오는’ 자신의 환자라고만 소개하면서 “이 한국인이 그들 지도자(김정일)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일 수도 있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솔직히 나는 그건 모르겠다”고 말했다.

● 北-EU, 교역.정치교류 활발(10/31)

- 북핵 6자회담이 진전을 보면서 북한이라는 잠재적인 새 ‘시장’에 대한 EU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도 이뤄짐으로써 북한 문을 두드리는 EU의 발걸음이 더 잦아질 것으로 예상.
- 한국수출입은행 배종렬 선임연구위원은 31일 “2001년 5월초 페르손 스웨덴 총리를 단장으로 한 EU특별사절단이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 개혁개방 의지를 확인한 뒤 EU의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면서 “이어진 북한의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EU기업의 대북 진출이 가속됐다”고 말했다.



- 코트라(KOTRA)의 ‘대외무역동향’에 따르면 북한과 EU간 교역액은 2001년 3억1천352만달러에서 2003년에는 3억3천851만달러로 늘었다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EU의 대북 제재가 시행된 2006년에는 2억3천462만달러, 지난해는 1억3천973만달러로 급감했음. 그러나 올해는 상반기에 8천800만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7천만달러에 비해 26% 늘어나 증가세로 반전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최근 EU의 무역현황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음.
- 북한과 EU 사이엔 정치분야의 교류도 빈번해지고 있음. 지난 2월 프랑스 외무부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 양국간 관계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유럽의회내 대표적 ‘북한통’으로 알려진 영국 노동당 소속 글린 포드 의원은 3월과 8월에 잇따라 방북했음. 6월에는 후버트 피르커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담당 분과대표단이, 9월에는 한.독의원친선협회장이기도 한 하르트무트 코쉬크 독일 하원의원이 방북했음. 북한도 지난 5월 김태종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노동당 대표단을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스에 보냈음.
- EU는 지난해 3월 6자회담 타결과 북한의 핵프로그램 폐기 결정을 지지하는 뜻에서 ‘EU 트로이카’ 대표단을 북한에 보내기도 했음.

● 태수용소 탈북자 2명 美 입국(10/31)

- 태국의 난민수용소에 있던 탈북자 2명이 이달초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추가 입국함으로써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이 법에 따라 미국에 난민으로 입국한 탈북자는 모두 70명으로 늘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1일 보도.
- VOA는 미 국무부 인구난민이민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태국 수용소에는 미국행을 원하는 탈북자 6명이 더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베이징 유엔고등난민판무관실의 보호를 받다가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지난 7월 체코 난민보호시설로 옮겨졌던 탈북자 4명의 미국 입국 절차도 진행중이라고 이 방송은 말했다.

● “김정남 접촉 프랑스의사 평양 들어가” <日TV>(10/29)

-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 뇌신경외과 의사가 지난 24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통해 평양으로 들어갔다고 일본 후지TV가 29일 보도.
- 방송은 이 의사가 프랑스 파리의 산타누 병원 뇌신경외과의 권위자인 프랑스와 구자비에 르 부장이라면서 그가 지난주 파리 주재 유네스코 대표부의 차량으로 샤를 드골 국제공항으로 이동, 지난 24일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구자비에 르 부장은 베이징 도착 당일 오후 평양행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후지TV는 보도.



● 佛의사 베이징 체류…北방문 여부 미확인(10/29)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치료를 위해 평양 방문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의 뇌신경외과 전문의는 28일 자신이 베이징(北京)에 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리 소재 생트-안느 병원의 프랑수와 사비에 루(57) 신경외과 과장은 AFP 통신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그가 현재 북한에 있다는 보도를 부인하면서 “지금 베이징에 있다”고 말했다. 루 과장은 그러나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치료할 계획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프랑스 유력 시사주간지 르포앵은 루 과장이 베르나르 쿠슈네르 프랑스 외무장관의 ‘긴밀한 친구’라면서 그가 지난 8월에도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쿠슈네르 장관은 의사 출신으로 ‘국경없는 의사회’ 창설 멤버임.

● 브라질, 北에 대사관 개설 추진(10/28)

- 브라질 정부가 평양에 대사관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현지 일간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가 27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은 최근 스리랑카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 잇따라 대사관을 설치한 데 이어 평양에 대사관 개설을 준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브라질 외무부는 구체적 시기를 밝히지는 않은 채 평양 주재 대사관 개설 추진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번 결정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적극 합류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브라질 외무부는 이와 함께 평양 주재 대사관 개설 방침은 세계 모든 국가에 대사관 및 영사관을 설치하겠다는 브라질 정부의 대외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북한과 브라질은 지난 2001년 3월 수교 이후 2004년 9월부터 상주 대사관 개설을 추진해 왔으며, 브라질 정부가 대사 파견을 위한 야그레망을 승인한 뒤인 2005년 6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박혁을 브라질 대사로 임명하고 대사관을 공식 개설했다. 브라질리아 주재 박혁 북한대사는 2005년 11월 말 룰라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뒤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주한美대사관 “11월17일부터 무비자 미국여행”(10/31)

- 관광과 상용 목적의 90일 이내 무비자 미국여행이 다음달 17일부터 시작. 주한 미국대사관은 31일 “한국 국민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



(VWP)를 이용해 11월 17일부터 미국으로 여행할 수 있다”고 밝혔음. 다만 항공기의 경우 양도할 수 없는 유효한 왕복티켓이나 다음 목적지가 명시돼 있는 티켓을 소지해야 하며 해로를 이용할 때는 VWP에 참여하는 배편을 이용해야 함.

-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과 헝가리, 체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등 7개국을 VWP 신규가입국으로 발표한 바 있음. VWP를 이용하는 여행자는 반드시 전자여행권을 소지해야 하고 여행 전에 전자여행허가 사이트(<https://esta.cbp.dhs.gov>)를 통해 입국 승인을 받아야 함.
- 미 대사관은 “90일 이상 미국에서 체류하거나 중도에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VWP를 이용할 수 없다”면서 “과거에 비자발급을 거절당했거나 미국에서 추방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VWP를 이용할 수 없으니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밝혔음.

● 美 “이라크 재건 위한 한국의 희생 기억할 것”(10/31)

- 미국 정부는 30일 한국의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 지원 임무를 마치고 오는 12월 전원 철수기로 한 데 대해 자이툰 부대의 성공적인 임무완수를 높게 평가하고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음. 미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의 자이툰 부대가 탁월하게 임무를 완수하고, 이라크 상황 진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며 자이툰 부대의 활동을 평가한 뒤 “오늘날 이라크에서 볼 수 있는 성공은 미국과 한국, 이라크 및 다른 지원국의 군대 및 국민의 용맹 덕분”이라고 말했음.
- 미 국방부는 특히 “쿠르드족 지역 재건임무의 주축으로서 자이툰 부대는 많은 사업분야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뒀다”면서 “미국과 이라크 국민은 한국 정부와 한국군, 한국 국민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명은 “한국은 미국의 가까운 친구이자 굳건한 동맹으로 한국이 이라크 안정화와 이라크 재건에 기여해 온 데 대해 미국은 고맙게 여기고 있다”며 “이라크 안정화와 재건을 위해 일한 한국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존경할 것이고 그들의 희생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미, 방위비분담 ‘현물전환’ 집중논의(10/30)

- 한국과 미국은 30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내년 이후 적용될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제4차 고위급 협의 이틀째 회의를 진행했음.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들간 진행된 이번 협의에서 차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과 제도 개선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면서 “특히 군사 건설의 현물지원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세부방안을 심도있게 토의했다”고 말했음. 문 대변인은 또 “우리측은 한미동맹 강화와 우리 부담능력에 맞게 적절한 수준의 기여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 쪽이 전액 부담한다’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제 5조의 예외협정으로, 그동안 2~3년 단위로 체결해 왔으며 7차 협정이 올해 종료돼 연말까지는 새 협정에 사인해야 함. 지난 해 한국은 전체 국방예산의 2.94%인 7천255억원 상당을 제공, 전체 주한미군 방위비 가운데 42% 정도를 부담했음.

● 한·미 4차 방위비협상 오늘 개최(10/29)

- 내년 이후 적용될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 제8차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한·미 고위급협회가 29일 오후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시작됨. 한·미는 3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협의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제공방식을 지금의 현금 위주에서 현물 위주로 바꾸는 방안과 한국의 분담금 증액비율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 제7차 방위비협정의 시한이 올해 말까지여서 양측은 연내 새 협정에 합의해야 함.
- 지난 3차례의 협의에서 미국 측은 한국의 현재 분담비율을 다른 동맹국과 비슷한 ‘공평한 수준’(50%까지)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내년의 경우 분담금 증액비율을 최소 6.6%에서 1999~2004년의 평균 분담금 증액률인 14.5%까지 올려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은 이에 대해 내년의 경우 지난해 국내 물가상승률인 2.5% 정도만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을 펴는 한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담금 제공방식을 지금의 현금 위주에서 현물 위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음.
- 이와 관련, 한·미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방위비 분담금 지원방식을 현물로 변경하는데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어 협의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 이번 협의에 한국측에서는 조병제 외교통상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정부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관, 미국측은 잭슨 맥도널드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들이 참석.

● 美, 北 급변사태 대비계획 구체화 제의(10/29)

- 미국은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30차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적용할 대비계획을 구체화하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9일 “미측은 당시 MCM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구체화하자고 제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상희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MCM 다음날 열린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



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고, 모든 우발사태에 대비해 긴밀히 협조하자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 장관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양국 차원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원칙론에 공감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 이 장관은 이와 관련, SCM 회의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한미 양국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은 대비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5029’로 발전시키는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는 단순히 개념계획 5029의 명칭을 바꿔 작전계획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개념계획 5029에 국한하지 않고 포괄적인 수준에서 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는 2005년 초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화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대해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다며 반대 견해를 표명, 작전계획화 작업이 중단됐으며 이후 양국은 개념계획만을 보완 발전해 나가기로 합의했었음.

● 미국방 “북핵위협 맞서 韓.일에 핵우산 제공”(10/29)

-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28일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 등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미국의 핵억지력에 의존하도록 핵우산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이츠 장관은 또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추구하는 한 미국이 일정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무기 관리를 강조했다.
- 게이츠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 위치한 카네기평화재단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처럼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배치하려는 ‘불량국가’들의 노력과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경고’했음. 그러면서 게이츠 장관은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할 수 있는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추구하는 한 우리(미국)는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WMD)로 미국에 도전하면 재앙과 같은 응징을 받게 될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도록 핵억지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美조지아 케네소大, ‘한국의 해’ 제정(10/28)

- 미국 조지아주의 케네소 주립대학(KSU)이 내년을 ‘한국의 해’(Year of Korea)로 제정하고 다양한 학술과 문화행사를 개최기로 했음. 매년 특정 국가를 지정해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국제적 경험과 지식을 넓혀온 이 대학은 최근 다니엘 팜 총장 주재로 열린 보직교수회의에서 ‘2009-2010년 학기’를 한국의 해로 정하고 본격 준비에 들어갔음.
- 이를 위해 이 학교의 국제교류프로그램 소장인 다니엘 패러카 소장



과 커뮤니케이션학과와 김희만 교수를 공동 추진위원장으로 임명하는데 이어 팝 총장은 내년 여름 한국을 방문기로 했음. 대학측은 내년 한국의 해와 관련해 내년 10월 7일 ‘한국의 해’ 개막식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한국의 정치 경제 역사는 물론 남북관계 그리고 한류로 상징되는 한국의 대중문화 및 정보통신 발전상 등을 소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임.

나. 한·중 관계

● “韓中 고위급 전략대화 12월 중국서 첫 개최”(10/27)

- 한국과 중국이 양국 외교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고위급 전략대화를 오는 12월 이전에 중국에서 개최기로 합의했음.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27일 “제7차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 주말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12월을 목표로 금년 내에 양국 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제1회 한·중 전략대화를 개최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음.
-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왕광야(王光亞) 중국 외교부 상무 부부장이 양측 대표로 나서는 이번 전략대화는 안보, 군사 문제를 포함해 양국 현안과 국제 문제 대처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회담 형식으로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됨.
- 대사관 관계자는 “중국에서 열린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이 회의는 세부적인 의제를 정하지 않고 양국의 공동이익과 관련된 중대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음.

다. 한·일 관계

● “日 안보리 상임이사국되면 한일협력 도움”(10/28)

-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는 28일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데)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한일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이날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08 재팬위크 기념 강연에서 그는 “일본이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돼 UN에 더 공헌하고 싶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음.
- 시게이에 대사는 “현재 UN의 힘과 영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아직까지 대체할 만한 기관이 없는데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많은 나라들이 교류협력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지만, 일본도 (상임이사국이 돼) 많은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모든 것이 돈(자금)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참고가 되는 사항”이라며 “일본(16%)이 미국(22%) 다음으로 많은 UN 분담금을 내는 반면 그만한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 일본 내에서 논란이 많다”고 설명했다.



- 그는 “올해 강하게 느낀 점은 한일 간에 커다란 공동이익이 있다는 것”이라며 “양국이 협동하고 협력한다면 이익을 얻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되고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시게이에 대사는 ▲국방 ▲UN 안보리 개혁 ▲경제 ▲문화관광 ▲한일관계의 세계화를 한일협력의 우선과제로 꼽았음. 그는 특히 “한일 FTA가 조속히 체결돼야 중장기적으로 양국 경제에 공헌하고 기업경쟁력 강화와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일무역적자 문제의 경우, 두 나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라. 중·러 관계

● 원자바오, 러시아 방문…국제질서 재편 논의(10/28)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27일 모스크바에 도착해 4박 5일간의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방문 일정에 들어갔음. 원 총리는 29일까지 모스크바에 머물며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회담을 갖고 금융위기 공동대처 방안과 국제질서 재편문제 등을 논의.
- 원 총리는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한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몇년동안 공동 이익의 기반을 확대하고 국제문제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수준이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평가했음. 그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양국 국민들의 기본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세계 및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원 총리와 푸틴 총리가 참석하는 이번 제13차 중·러 총리 정기회의는 총리 정기회의위원회와 에너지 협상대표 회의, 인문협력위원회 회의 등 모두 3개 분과 회의로 구성돼 있음. 이어 원 총리는 31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제7차 총리회담에도 참석.

☉ 국제관계연구실 제공